9장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과 한일관계

이원덕

서론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지역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성시켜 나갔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 인식은 현재 아세안+3(ASEAN Plus Three: APT)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라는 지역협력의 틀로 발전해 가고 있다.[1]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가 창설된 1989년 이후의 일로 볼 수 있다. APEC 창설에 적극적인 주도권을 발휘한 일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속에서 인식하면서 대미기축 외교노선과 아시아 중시노선을 조화시켜 나갔다. 이어서 일본은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아세안+3의 장에서 적극적인 동아시아 지역 만들기에 나서는 한편, 2005년 EAS의 출범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2]

1) 지역주의란 단순히 복수의 국가의 모임을 의미하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 또는 공유하려고 하는 의도하에 협력을 추진하려는 지향성을 일컫는다. 바꾸어 말하면 지역주의란 어떤 복수의 정치단위가 지리적 근접성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역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일컫는 개념으로 지역 내의 정책협조 및 협력을 추진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공동체를 추진하려는 시도와 동학을 의미한다. 펨펠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를 구분하고 있다(Pempel 2005).

2) 지역은 단순히 자연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특정한 의도와 인식을 지닌 주체에 의해서 구성되고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연구 및 지역인식의 방법론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矢野 暢(1993)를 참조.

이 글에서는 일본이 추진하는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러한 일본의 지역전략이 한일관계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향후 도래할 신시대 한일관계의 발전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2000년 중반부터 일본정부와 관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의 이념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 전략의 기본성격과 특징을 규명한다. 이어서 동아시아지역 만들기를 둘러싼 한일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시대 한일관계의 구조변화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전략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

전후 일본은 애당초 지역주의 정책 추구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대동아 공영권의 파산에서 오는 부(負)의 역사적 유산도 한 몫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전후에 냉전과 열전의 와중에 휩싸여 있었다는 사실도 일본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와다 하루키 2004, 15-2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미국의 냉전정책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대외노선을 견지하게 되었다. 즉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의 그늘 속에 들어가 안주하며 독자적인 지역형성 추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다.

일본이 지역 만들기에 비로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게 된 것은 대체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이후의 일이라고 하겠다. 1990년대 이래 일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태 지역주의 속에서 위치시키면서 기존의 대미 기축외교 노선과 아시아 중시 노선을 타협, 조화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아태 지역주의 추구 경향은 1997년 동아시아 통화금융 위기를 계기로 그 중심축이 아세

안+3로 옮겨갔다. 이러한 경향은 대외경제정책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의 창설 기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에서의 주도적 역할, 동남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추진 등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출범을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이 비로소 형성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 만들기가 시도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신의 동아시아 지역정책을 일컫는 용어로서 '동아시아공동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전후의 일이다.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 입장이 수립된 것 또한 대체로 그 무렵인데[3]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2004년 6월 APT 외상회의에 제출된 이슈페이퍼(Issue Paper)와 2005년 8월 동아시아공동체 평의회가 발표한 정책보고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현상, 배경과 일본의 국가전략" 그리고 2006년 11월에 외무성이 발표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대한 일본의 사고방식"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 후 2009년 자민당 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등장한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은 '동아시아공동체'라는 개념을 민주당 신 정권의 일종의 새로운 외교목표로 내걸면서 비상한 주목과 관심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정책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외교적 슬로건으로 그친 인상이 강하다. 즉 하토야마 수상의 집권 시 '동아시아공동체'는 정치적 언술로서는 빈번하게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담보한 정책으로 형성되지는 못한 채 정권의 운명과 더불어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토야마 전 수상의 동아시아공동체 개념에 대한 애착에도 불구

3) 2002년 1월 고이즈미 수상의 싱가포르에서의 연설 및 2003년 12월 일-아세안 정상회담에서의 제안에는 '공동체'라는 용어대신 '커뮤니티'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라는 개념을 하나의 정책용어로서 확정시켰다. 이후 일본의 학계나 정책 서클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고 실천적인 영역에서 새롭게 추진된 정책 내용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 외무성은 2006년 11월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공동체 구축과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기본입장에 관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입장은 상기의 이슈페이퍼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과도 중복되고 있으며 앞서 인용한 평의회의 정책보고서와도 상당부분 합치하고 있다. 이 입장은 2004년부터 일본이 공식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언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핵심적 이념이자 추구하고 있는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東アジア共同體評議會 2005, 40-41 ; 日本外務省 2006).

첫째, 열린 지역주의 원칙의 추구이다.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가 아세안, 한중일과 더불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대영역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미국 등이 각종 기능적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의 싱가포르 연설에서 동아시아 커뮤니티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EAS에 기존의 APT멤버와 더불어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2005년부터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EAS에는 중국 등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의 입장이 관철되어 아세안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정식 멤버로 들어왔다. 일본은 명분상 동아시아공동체가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의 원칙하에 폭 넓은 파트너의 참여와 그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4)]

둘째, 동아시아공동체 수립에는 무엇보다 기능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

4) 미국의 냉전전략의 틀 속에서 당시 동남아지역의 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수립된 콜롬보 플랜과 ECAFE 등에 정식 멤버로 가입하는 등 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관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본은 1667년에 설립된 아세안과의 협력에 주력하게 되고 1970년대 이후에는 후쿠다 독트린의 제창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게 된다.

다. 즉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발전수준, 문화, 민족, 종교, 정치이념, 안보정책 등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 EU와 같은 높은 수준의 통합을 지향하는 포괄적인 정치 제도나 틀을 일거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금융, 통상, 환경, 인간안보 등의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 기능적인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장차 지역통합의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익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민족주의적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역내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일본의 기능주의적 접근은 일견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는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글로벌 룰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지역협력을 넘어서 복수의 국가들로 구성되는 공동체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체성이 요구되며 필연적으로 공동체가 공유할 이념과 가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치주의, 시장경제, WTO 등의 글로벌 룰 등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동아시아공동체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전 일본이 내세운 흥아론, 대동아공영권 등에서는 아시아적인 전통 가치가 중시된 것과는 달리 현재의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서는 대단히 서구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처럼 서구적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규범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의 성격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형성 정책 및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전략은, 단적으로 말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5]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전략에서 핵심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중국과의 지역 리더십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이래 일본외교가 당면한 핵심과제는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강대국화 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지역주의 외교는 기본적으로는 2000년 초부터 진행된 중국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출현한 것임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중국의 대(對) 아세안 공세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조기 실현의 전격 제안과 그를 구체화하기 위한 선행적 조치 실현으로 명확하게 나타났다.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구체적으로 노골화되자, 일본으로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수수방관했다가는 아세안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중국에게 지역주의 형성의 주도권을 넘겨줄 지도 모른다는 위기위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2004년부터 일본에서 주창된 동아시아공동체론도 따지고 보면 대중 견제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03년 역내 국가의 민간 싱크탱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 NEAT)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2004년에는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EAS의 개최 성사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중국의 이러한 지역주의 공세는 일본을 자극하여 결국 일본에서는 산관학 합동으로 동아시아공동체 평의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 본격적으로 생산, 유포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동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중국의 경제, 군사 분야에서의 급속한 대국화 현상과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획기적인 증대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2004년부터 출현한 일본 발 동아

5) 이러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로는 이원덕(2005), 손열(2008), 김기석(2005), Kenneth Pyle(2007), 小原雅博(2005) 등이 있다.

시아공동체 담론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한편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도 더 나아가 중국을 일본이 원하는 질서 속에 얽어 넣을 수 있는 지역주의 전략 개념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은 중국에 대한 견제적(Balancing) 측면과 더불어 대중(對中) 관여(Engagement)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성원으로 APT 이외에도 일본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역내에서 중국의 주도권 행사를 상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의 보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적 인권 등을 내세움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보편가치의 수용에 압력을 가하는 기제로 활용한다. 일본이 의도하고 있는 공동체 지역범위의 광역화 시도와 이념으로서의 보편가치 표방은 한편으로는 중국을 국제정치적으로 포위,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 중국에게 정체성으로서의 민주-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압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이래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유행과 더불어 일본 정부는 외교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가치외교', '민주동맹', '자유와 번영의 호' 정책 등을 새롭게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기 위한 일본 나름의 전략적 발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체제와 이념면에서 이질적인 초강대국 중국을 포위, 견제하고 체제변혁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데 보편 가치를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 추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

것이 미일동맹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형성 정책의 추진을 기존의 대미기축 외교노선과 모순적인 것이나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지역주의 추구 노선과 대미동맹의 강화노선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 대외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추구는 대체로 통화, 금융의 이슈영역과 통상, 투자의 이슈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군사, 안전보장, 외교의 이슈영역에서는 여전히 미일동맹 중심의 대미 기축외교가 핵심적인 외교안보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기본 틀을 흔드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극히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일본은 안전보장에 관한 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메커니즘 구축에 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대만 문제, 중국의 장래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은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안전보장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속속 취해 왔다. 이와 더불어 2001년 9 · 11테러 발생 이후 미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의 수행에도 일본은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변환 및 동맹변환에도 일본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996년의 미일 신가이드라인과 미일동맹의 재정의, 2004년 새롭게 책정된 방위대강, 미사일 방위계획에의 참가 등은 일본의 대미동맹 강화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일본은 미일안보체제를 더욱 심화시켜 미국과의 군사적 일체화를 꾀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미일안보체제의 적용 범위를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지구적 범위로 확장하는 이른바 지구적 파트너십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 정부의 기본적 사고방식은 금융, 통상, 투자 분야의 지역통합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전략을 고수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과정에서 고차원의 정치적 제도화를 추진하기보다는 분야별 기능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급속한 출현을 경계하는 미국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APT 결속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방관해 왔으나 근년 들어 중국의 급부상과 역내 영향력의 급속한 확장에 대해서는 경계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본이 공동체의 지역적 범위를 남태평양과 인도로 확장시키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국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과 한일관계

한국의 지역주의 구상과의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나름의 '동아시아공동체'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역주의 구상을 펼치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남북한 분단체제가 엄존하는 가운데 한국은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대외전략이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다. 따라서 한국 대외전략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군사안보를 지탱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인 한반도의 조건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러한 강대국과의 양자관계를 뛰어넘은 지역주의 전략을 추진하는 것에는 애당초 한계가 존재했다.

한국의 지역주의 프로젝트는 독자적인 발상과 개념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당

시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국제시스템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나름의 대응전략으로 고려되었다. 인식과 담론의 차원에서는 보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의 대외정책이라는 차원에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한국 정부가 추진한 지역주의 프로젝트는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냉전시기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냉전종식 이후에는 점차 지역 개념이 혼재를 겪게 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동북아시아 지역주의의 세 구상이 서로 경합을 이루면서 진화해 왔다(동북아역사재단 2009, 118-145).

동아시아가 냉전질서 하에 놓여있던 전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정부의 지역주의 관념을 지배해왔던 것은 아시아-태평양이었다고 판단된다. 일찍이 이승만 정권은 태평양동맹구상을 제창하였는데 이 구상은 기본적으로 격화하는 동서 냉전질서 속에서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서방 진영의 국가들을 결속시키고 서방의 맹주국인 미국의 개입을 제도화하는 데 목표를 둔 지역주의 프로젝트였다.[6]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생한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ian and Pacific Council: ASPAC)도 냉전질서 하에서 반공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를 추구하는 지역주의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구는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하여 미국의 존슨 행정부의 협력을 얻어 결성한 것으로 한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의 반공국가가 참여하였으나, 1970년대 중국의 부상과 베트남 패망에 의해 사실상 와해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냉전질서는 해체되고 새로운 지역주의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의 지역 구상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가 일정 기간 지속 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새롭

6) 이승만 대통령이 태평양동맹의 참여국으로 상정했던 것은 미국과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을 위시한 동남아 반공국가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남미국가였다. 반일정책에 따라 일본의 참여는 배제되었다.

게 등장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동북아 지역주의가 한국 지역주의 전략의 중심무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첫째, 1990년대 중반까지는 APEC의 출범과 잇따른 제도화의 과정이 진척됨에 따라 한국도 이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지역 구상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속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1994년에 아세안 지역포럼(ARF), 1996년에 아셈(Asia Europe Meeting: ASEM)에 참여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를 충실하게 추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APEC의 결속력은 무역 자유화를 둘러싼 역내국가 간의 갈등을 계기로 하여 급속하게 이완되었다. 더욱이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경제위기 상황에서 APEC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지역 기구로서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는 극에 달하게 되었다.

둘째,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구상보다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된 아세안+3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형성을 주도하고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지역주의 정책의 전환을 꾀하였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 동아시아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EASG)을 제안하고 행동계획을 작성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아세안+3가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제도화되는 데 실질적으로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노무현 정권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중장기 국가전략의 프로그램으로 제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을 한국이 추구해야 할 지역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 동북아 지역이란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핵심적인 멤버로 하는 것으로 외교안보 영역은 물론 금융 및 물류 허브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에너지, 철도 분야 등에서도 동북아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킨다는 구상이었다. 이 구상은 냉전종식 이후 중국, 러시아와의 수교를 통한 북방정책 추진의 연장선에 있는 지역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데다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7]

지역주의 프로젝트의 한일 간 입장 차이

냉전 시기는 차치하고 2000년대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이 추진하는 동아시아공동체 전략과 한국이 추구하는 지역주의적 구상에는 일정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양국이 처해있는 지정학적 조건과 정치경제적 상황에 입각하여 정의되는 국가이익과 전략인식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는 동아시아의 지역 조직화를 꾀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지향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주의의 구성 범위 및 지역 내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일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범위를 동북아시아로 한정짓기보다는 광의의 동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정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해양국가로서의 일본의 지정학적 조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도서와 해양으로 연결되는 지역적 연결을 중심으로 지역주의 형성을 구성하려는 일본적 발상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동남아시아 지역은 일본이 추구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핵심적 위치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20세기 전반 동남아시아 지역은 일본이 추구한 대동아공영 경제권의 원료 공급지로서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부존자원이 빈곤한 일본은 전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도 동남아 지역을 산업자원과 원료의 주된 수입원으로 중시했으며 한편으로는 주요한 공업제품과 산업 인프라의 큰 시장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일본은 20세기 이래 동남아지역을 자신의 핵심적인 경제적 전략적

배후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이원덕 2005, 85-86).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경제적 관여의 정도는 1990년대 이후에야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에 비하면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역주의 발상의 핵심은 여전히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 머물러 있다. 물론 김대중 정권 시기 아세안+3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에 역점을 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그러한 흐름은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한국의 지역인식에서 주류를 차지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한국이 동북아에 한정된 소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 점에서 아시아 지역주의 사고의 범위를 동북아시아에 한정시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존재한다.[8]

또한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일본적 사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국가들이 일본과 심화된 경제적 상호의존 및 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 및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서 역내 국가 간 역학관계 속에서 일본의 입지를 유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일본이 이 국가들을 동아시아공동체에 굳이 포함시키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

7)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지역주의 프로젝트 추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천명하였으나 이 구상은 새로운 지역주의 구상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외교의 지평을 4강 외교를 넘어서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적 언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기석 2010, 104-108).

8) 물론 일본 내에서도 와다 하루키, 모리시마 미치오, 강상중으로 대표되는 일부 진보주의적 지식인들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역형성을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인식이 일본 정부의 지역형성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와다 하루키(2004), 모리시마 미치오(1999), 강상중(2002)을 참조.

취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긴밀한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우방국이긴 하지만 이 국가들을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구성 멤버로 묶어야 한다고 하는 발상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국의 지역주의적 발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차이는 그 외교적 지향점과 전략적 목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일동맹에 대한 배려와 대중 견제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을 뿐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수립 그 자체가 목표라고 보기 어렵다. 돌이켜 보면 전전 일본이 주창한 대동아공영권도 '아시아의 일본화'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려는 제국 일본의 일방주의 이데올로기였을 뿐 진정한 아시아 공생질서는 결코 아니었다. 즉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는 일본의 배타적 이익과 국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역시 일본 외교의 최대 관심사인 대미동맹의 강화와 대중 견제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내지 수단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 목표는 일차적으로는 한국의 국익 극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국익 실현의 최소 조건으로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보다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념적 평화지향성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조건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속에서 주변 열강의 침략과 지배를 피하고 자국의 안보를 모색하기 위한 생존 전략에 부심해왔다. 주변세력을 무력으로 침략하거나 지배한 경험은 한국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적 부채를 갖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

국은 평화주의적 비전과 목표를 추구하는 지향성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 만들기는 어느 일방에 의한 패권적 지배가 아닌 역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는 평화질서의 수립을 지상의 목표로 한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니다. 동북아에서 상대적인 약소국의 처지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패권적 질서야말로 회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은 반 패권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한국의 평화주의적 지향의 또 하나의 원초적 출발점은 남북한의 분단현실과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사실상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이 안전과 평화를 담보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한 최대의 걸림돌은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역 만들기의 기본전제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유지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 목표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지역적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북한 변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이 결여하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 전략 추구와 북한 문제의 해결을 별개의 외교목표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이 두 과제를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만들기의 효과적인 추진에 필수적인 외교적 리더십 발휘의 조건과 여건에서 양국이 처해 있는 위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의 여타 구성원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공동체 수립을 위한 행동에는 이렇다 할 눈에 띄는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9]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형성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기보다는

9) 일본에 비하면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APT의 운전석에 앉아 나름대로 지역공동체 수립을 위한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국력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지역형성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형성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주도권을 견제하고 상대화하기 위한 수세적인 차원에서 '지역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형성 과정에서 비춰지는 일본의 외교적 리더십 결여 배경에는 2000년대 이후 일본정치의 혼란과 난맥상도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5년 이상 집권했던 고이즈미 수상은 근린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으며 대미관계 중시 입장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한국, 중국 등 아시아외교에 실패했다. 고이즈미 수상 이후에는 3년간 세 명의 수상이 교체되면서 자민당 정권의 무책임과 무기력을 노정했다. 자민당 정권은 국내정치 문제에서 각종 스캔들과 실정이 폭발적으로 표출되어 동아시아공동체 등의 외교문제에 대해 전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다. 2009년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야심찬 외교목표로 내걸고 화려한 수사를 구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말을 고했다. 하토야마 정권에 이어 집권한 간 나오토 정권은 하토야마 수상이 주창한 동아시아공동체 외교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은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하면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을 펼쳐나가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용이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 일본의 사이에 존재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 한국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지역협력의 구상을 전개하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일방적인 패권주의적 지배를 경계하고 우려하고 있는 아세안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이 주장하는 지역주의 구상은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호혜적이고 수용적일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규모 면에서 중국, 미국, 일본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힘에 기반을 둔 강력한 지역주

의 주도세력이 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점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대국 간 세력 각축의 조정자 역할이나 대국 간 주도권 경쟁의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역협력체의 구축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비전과 이념을 제시하고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 중재하는 데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요컨대 2000년대 초반 APT의 제도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상대적인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EAVG, EASG의 제창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형성 정책에 결여되어 있는 가장 큰 요소는 근린국가와의 역사적 화해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특히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종군위안부 보상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역사마찰 문제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대일 신뢰에 주는 악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둔감하다고 생각된다. 향후에도 역사문제는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형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역사 문제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은 일본과는 반대로 침략주의적 제국의 역사에서 오는 속박과 구속을 전혀 받지 않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의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지역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 국가의 리더십이 원만하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부터의 신뢰와 이해와 그리고 지지 획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문제에 관한 한, 피지배와 피식민의 역사를 체험한 한국은 제국의 역사를 지닌 일본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훨씬 평화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이념을 주창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신시대 한일관계의 도래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상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바야흐로 미중 양강구도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환경에 의해 그 존재양식이 근본적이고도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한일관계에는 냉전시대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보면 이른바 신시대 한일관계가 새롭게 도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먼저 신시대 한일관계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는 요소부터 살펴보자.[10]

첫째,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양국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2010년의 2분기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규모에서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11] 이는 거시적으로 보면 중국이 120년 전 청일전쟁에 패배한 이래 일본을 경제 규모에서 앞지른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장기적인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걸친 150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예외의 시대였는지도 모른다. 이 예외의 시대 150년 간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하여 세계 열강국가에게 굴종을 강요당하며 강대국의 지위를 박탈당한 반면, 일본은 20세기의 전반기에는 군사대국으로, 그 후반기에는 경제대국으로서 위용을 떨쳤다.[12]

19세기 이래 일본은 국가전략의 핵심개념으로 탈아입구론을 제창했으나 150년간의 예외의 시대에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아시아로의 회귀를 신중하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09년 일본에서의 민주당 정권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적응하려는 현실주의적 노선 모색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일본은 심각한 재정적자, 고령화, 저출산으로 상징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힘의 상대적 저하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13]

둘째, 1990년대 이후 한일 양국 간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점차 이동하게 된 점 또한 양국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한국을 지배하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일관계는 전형적인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비대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보다 일본과의 안보적 협력이나 경제협력을 획득하는 일에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북한과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구도 하에서 주요 우방국인 일본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해칠 수 있는 대일행동을 자제하려고 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는 바도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한국은 꾸준한 고도 경제성장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선진경제국으로 도약했으며 한편으로 1980년대 후반 이래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성과도 착실하게 달성하였다. 특히 1990년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입은 한국이 비로소 선진국의 일원으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여겨졌다. 이후 한국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명실 공히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어 2010년 마침내 G20의 일원이 됨으로써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이 정치

10) 이하의 서술은 이원덕(2011)의 제2장을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의 논지에 맞게 대폭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11) 2010년 2분기(4-6월),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돼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내주었다. 이는 일본이 1968년 독일(당시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른 지 42년 만이다(〈동아일보〉2010/08/17).

12) 앵거스 메디슨의 역사통계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으로 보았을 때 1820년 당시에도 중국은 세계 GDP의 32.9%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계하고 있다. 한편 2030년에는 중국이 23.8%의 지분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은 3.6%만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Maddison 2008; 다나카 아키히코 2010, 76-79).

13) 2010년을 계기로 중국이 국내총생산액 규모에서 일본을 능가하게 된 현상을 두고 일본이 주도한 동북아의 근대사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중국이 군림하는 새로운 동북아의 현대사가 개막되었다고 진단하는 시각도 존재한다(정재정 2010, 1-2).

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은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한일 간 파워의 상대적 균등화 현상은 정치, 경제, 산업 분야를 넘어서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드라마, 가요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는 일본에서 한류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위력을 떨치고 있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보듯이 한국이 각종 스포츠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고 그 폭도 넓어졌다.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과거에 비해 극적으로 호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14] 한일관계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파워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균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한일관계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1990년대 이후 한일 양국 간 관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양국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한일관계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타파하고 민주화를 착실하게 달성시킨 결과, 선거에 의한 수차례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안착시켰다. 기본적인 인권은 놀라울 정도로 신장되었으며 사회경제적인 다원화, 자유화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본적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뤄진 한일의 가치체계 및 규범의 수렴 현상은 양국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14) 2000년대 이후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50%를 상회하고 있다. 2005년 한일 간의 격심한 독도, 과거사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양국은 전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국가주도형 발전국가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공산품의 해외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는 국가발전 전략을 취해 왔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국은 급속하게 글로벌화하는 세계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국가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

민주와 자율의 가치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가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 또한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니는 중요한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시민사회는 정부 간 관계 못지않게 1990년대 이후 매우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간 시민사회의 교류 기반은 국익을 넘어선 인권, 평화, 환경, 인간 안전보장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근년 들어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간 교류는 엄청난 폭과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한일양국의 국익을 넘어선 보편적 규범과 가치의 공유 기반이 획기적으로 넓어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일관계의 구조적인 성격 변화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신시대 한일관계는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1세기의 동아시아 질서가 미중 양강구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초강대국 미국과 신흥 초대국 중국의 사이에 낀 중간적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말할 나위도 없

지만 일본의 경우도 더 이상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도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본적 인권과 자유, 환경, 복지 등의 시민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폭 넓게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소비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고도의 산업구조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기반과 더불어 양국 간 사회, 경제적 상호의존, 상호침투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일관계의 현주소라 하겠다.

한일 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을 둘러싼 외교전략적 입장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안전과 평화 그리고 공동번영이 가능한 동아시아의 지역공동체 구축을 추구한다는 외교적인 목표 개념에는 이론이나 견해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한일 양국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이 어느 일방의 패권적인 지배나 독점적인 주도권 아래 지배되는 상황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신시대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은 양국의 골 깊은 역사마찰을 창의적인 노력으로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 영역에 걸친 전면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가 주도하는 냉전체제 하의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 노력을 통해 유럽공동체 건설의 주역을 완수했던 것처럼 신시대 한일관계의 미래상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화해를 기반으로 하여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 수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보장, 경제체제, 시민사회 등 제반 영역에서의 체제 수렴현상

또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 이는 향후에도 한일관계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적 발전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규모와 질적 수준이라는 양면에서 볼 때 정치적 민주주의와 선진적인 시장경제,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국가로서 동아시아공동체 수립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참고문헌**

강상중. 2002.《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서울 : 뿌리와 이파리.

김기석. 2005.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정책의 딜레마". 〈국가전략〉 11, 4.

_____. 2010. "동아시아의 새로운 공동체 구상 :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그리고 신아시아외교". 〈일본공간〉 7.

다나카 아키히코 저, 이원덕 역. 2010.《포스트 크라이스의 세계》. 서울 : 일조각.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모리시마 미치오 저. 장달중 역. 1999.《일본은 왜 몰락하는가》. 서울 : 일조각.

손　열. 2008.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론 : 중국정책으로서 일본의 지역주의".《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하영선 편.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와다 하루키 저, 이원덕 역. 2004.《동아시아 공동의 집》. 서울 : 일조각.

이원덕. 2005. "일본의 동아시아지역 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22.

_____. 2011. "신시대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일본연구〉 15.

정재정. 2010.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 100년의 성찰".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국제회의 '한일여론 지도자 심포지움' 에서의 기조연설.

〈동아일보〉 2010년 8월 17일.

矢野暢. 1993. "地域研究の手法講座".《現代の地域研究1》. 東京 : 弘文堂.

小原雅博. 2005.《東アジア共同體》. 東京 : 日本經濟新聞社.

東アジア共同體評議會 編. 2005.《東アジア共同體構想の現狀´背景と日本の戰略構想》.

日本外務省. 2006.《東アジア共同體構築の係わるわが國の考え方》.

Maddison, Angus. 2008. "Shares of the Rich and the Rest in the World Economy: Income Divergence Between Nations 1820-2030" *Asian Economy Policy Review* 3.

Pempel, T. J. ed. 2005. *Remapping East Asia-The Construction of Region.* Cornell University Press.

Pyle, Kenneth. 2007. *Japan Rising: The Emergence of Japanese Power.* NY Public Affairs.